

한·미 FTA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한미 FTA, 불가능하거나 졸속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 뿐

FTA는 WTO 협상과는 달라서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되는 양자간의 협정이다. 따라서 FTA는 국가간의 무역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나라가 15개국에 불과한데 이마저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모두 중동,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다. 따라서 FTA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처럼 말하는 정부의 주장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강민수
전국농민연대 사무국장

그런데 우리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스크린쿼터를 줄여가면서까지 미국과의 FTA를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에 한발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GDP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따져 볼 문제고 실제로는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과 동아시아의 재구조화라는 요청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01년 3월 무역정책 아젠다를 통해 FTA를 중점추진 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2002년 미국 의회의 승인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축진권한(TPA)¹⁾은 내년 6월로 종결되도록 되어있다. 결국 다급한 것은 미국이다. 문제는 칠레와의 FTA도 협상개시부터 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는데 칠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미국과의 FTA를 1년 만에 마무리 한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다. 이마저 미국 의회의 사전, 사후 검토 기간 각 90일을 제외하면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위해 실질적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은 고작 앞으로 11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의 FTA를 마무리 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만약 체결에 이르면 이것은 졸속협상의 경우 뿐이다.

한·미 FTA가 다급하게 추진되는 또다른 이유는 동아시아의 재구조화라는 정치적 문제 때문이다. 2002년 10월 북의 핵보유 발언으로 재 점화된 동아시아의 핵 위기는 2005년 6자 회담 틀 속에서 발표된 9.19공동 성명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재구조화하려던 미국의 의도는 빛나갔다. 6자회담이라는 틀은 냉전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한·미일 3각 동맹에 비해서는 미국에 불만인 관리 체제 일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개선, 한중일 경제협력의 강화등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를 어렵게 하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재구조화기 위한 첨병으로 만들길 원했고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20여개 나라중 한국이 포함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 무역축진권한(TPA)이란 미국 의회의 고유 권한인 무역협상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한 것

한·미 FTA 관세철폐 효과 의문

한·미 FTA가 꼭 가야할 길이라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한·미 FTA 결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미국의 공산품관세는 평균 2% 수준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FTA가 체결된다 해도 이 정도 관세철폐를 통한 가격인하로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또한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6년 1월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가 체결 될 경우 대미 무역 흑자가 단기 42억 달러, 중장기 51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는데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하는 데 그쳐 한국이 무역적자로 돌아 설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 분야는 피해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2조에서 최대 8조 8천억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GDP가 일년에 약 20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는 농민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형벌이며 경제적으로 농업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과 한·미 FTA를 통한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GDP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닌 한·미간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도 증가하지만 수입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의 피해는 확실하고 중장기적인 개선효과는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면밀한 조사도 없이 미국측의 통상협상 일정에 맞춰

FTA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FTA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예상했지만 미국의 투자는 늘어났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자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통상절차에서 배워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9년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주요국가들과의 FTA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우리나라를 거명하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후 1999년 한국과의 FTA 추진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정부간 FTA 추진 예비협의를 진행키로 합의 한 이후 양국 정부간 사전 실무점검회의를 거쳐 지난 2월 3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외통상협상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무역협상권이 의회에 있음으로 해서 자국에 불리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평범한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것의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이로울지 해가 될 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용어들이 어려워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한가한 소리라고 편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 길이 당장 막히는 것도 아닌 마당

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꼭 추진해야 하는 지 의문이며, 백보양보해서 미국과의 FTA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위험한 일등보다 안전한 이등을 택해서 일본이나 중국 다음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지에 대한 명확한 준비없이 한·미 FTA를 서둘러서는 안된다. 애초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미국의 요구에 따라 2월2일 형식적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2월3일 FTA 개시를 선언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지금 서두를 일은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협상 절차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를 교훈 삼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상절차의 경우에는 민주적 협의와 통제절차 없이 통상교섭본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만이 존재 할 뿐이다. 다행이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41명의 의원이 공동제안한 국무총리 산하의 통상위원회 구성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입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은 영화인이 부럽다.



수입을 재개하였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 부문은 최소 2조에서 8조8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농업생산액이 일년에 약 20조원

에 달하니까 노동자로 치면 연봉이 10%에서 40%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 한데 농민들이 국익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의 투쟁을 보도조차 하지 않거나 집단이기주의로만 매도하는 언론의 태도다. 그래서 농민들은 영화인들이 한없이 부럽다.

농업계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하기로

세계화 시대에 자유무역협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와 같은 통상국가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자유무역협정이라 해도 그것이 일부 재벌과 기업에만 유리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당연히 반대 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나 캐나다의 경험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스위스는 자국농업 보호를 위해서 미국과의 FTA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일본도 아직 미국과의 FTA를 개시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정부가 한·미 FTA를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하여 농업계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스크린 쿼터를 반으로 줄이고, 형식적인 공청회 다음날 협상 개시를 선언한 정부의 행태는 농민들은 결코 용서 할 수 없다. 한칠레 FTA를 통해 농민들은 FTA가 가지는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정부가 원점에서 한·미 FTA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투쟁을 피할 길은 없다. 희망이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란 점을 상기하며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자.